

# 122명 '슈퍼 공수처' ... 檢·警보다 우선 수사권 갖는다

###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부터 2급 공무원까지 공직업무 관련 범죄 처벌대상

#### 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외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

수 등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된다.

일부 국회 계류 법안에 있던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발의 시 수사 착수'라는 내용은 중립성 우려 등을 고려해 빠졌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웃돈다. 처장과 차장 외에도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처장은 범죄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6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 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면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수사 독점권'이 아닌 '상대적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반부패 수사에서 경쟁한다는 취지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검·경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찰관의 비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김경준 전 검사장이나 김형준 전 검사의 경우처럼 검찰이 내부 비리를 수사하는 길이 차단된다. 거꾸로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법안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 갖고 충돌 땐 조정기구 운영한다”

####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지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18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경찰과의 수사권 배분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공수처만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도 고위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 범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있을 때, 영장 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는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무조건 고위 공직 사건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라 동시 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충돌할 때는 조정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모든 범죄의 범주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한다”며 “수사기관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수사하도록 해 수사 결과의 대내외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염원을 받들어 엄정하고 효율적인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며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꿈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대북 인도지원 시기 굉장히 늦추고 조절 예정”

#### 송영무 국방장관 국회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여러 물음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조율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 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이다.

또 핵 보유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동북아 상황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진전된 한미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MCM(한미 군사위원회), SCM(한미 안보회의) 의제로 상정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토식 핵 공유를 말하는 거냐’고 확인성 질문을

하자 “그건 아니다”면서 “확장 억제 전략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참수 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송 장관은 “(참수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오라가라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술 핵 관련 여론 등을 자렛대로 사용하고자 깊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핵무기 확장 억제 정책에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즐거움이 있는 그곳!**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 (주)